

포스트 김정일 체제 전망과 우리의 대북정책 과제

정성장 /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북한의 김정일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지난 8월 중순 뇌졸중 또는 뇌혈종으로 보이는 뇌혈관 이상 증세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측은 김정일 총비서의 건강상태에 대해 “밖으로 다닐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의식이 있고 언어에 전혀 장애가 없다”고 밝혔다. 한 정부 당국자는 김 총비서가 “양치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김정일이 제대로 운신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안정과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국내의 뇌졸중 관련 전문의들은 판단하고 있다.

뇌졸중 환자는 질병발생 후 1주일 이내에 사망률이 가장 높으며, 생존자의 10%는 완전히 회복되기도 한다. 또 40% 정도는 장애를 가지며, 40% 정도는 중증 장애를 갖고, 10%는 전체적인 치료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김정일이 완전히 회복될지 부분적이거나 중증 장애를 가지게 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일의 건강 상태에 대해 우리가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의 건강 회복 정도에 따라 향후 북한 통치체제의 모습이 크게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건강 회복과 관련하여 1) 완전 회복, 2) 부분적 회복, 3) 병의 재발 등으로 인한 사망의 세 가지 경우와 그에 따른 통치체제의 변화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의 건강이 완전 회복되는 경우의 후계 문제 결정

김정일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기까지에는 적어도 3~6개월 정도의 안정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기간 동안 김정일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1호 결재(김 총비서가 직접 하는 결재)라고 하더라도 선별해서 최소한의 결재만을 해야 할 것이다. 과거 김정일이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팩스 문건을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및 부인과 처리했다는 증언이 있는데, 적어도 앞으로 수개월 동안 김정일이 처리하는 업무량은 수술 전에 비해 1/10 이하로까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과거에 김정일이 직접 처리했던 업무의 대부분이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현재 그의 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옥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정일은 “수령을 직접 보좌하여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수령의 노고와 심려를 덜어드릴 수 있는” 후계자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김정일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더라도 과로로 인해 다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량을 과거보다 대폭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후계자 결정을 서두르지 않았다고 해도 앞으로는 후계자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정일은 향후 2~3년 내에 후계자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후계자로는 그의 ‘숨겨진 아들’ 김정남보다 ‘사실상의 장남’ 역할을 하고 있는 김정철이나 그의 동생 김정운이 유력시된다.

김정일의 건강이 부분 회복되는 경우 공동정권의 출범 가능성

뇌졸중 환자의 90% 정도가 가벼운 장애 또는 중증 장애를 가지게 되는 일반적 사례에 비추어볼 때 김정일이 완전 회복되기보다는 부분 회복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완전 회복되는 경우에는 과거보다 횡수를 줄이더라도 현지지도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겠지만, 부분적으로만 회복되어 말이나 거동에 지장이 생긴다면 현지지도 횡수를 대폭 줄이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외국 정상과의 회담이나 외빈 접견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용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건강이 완전 회복되는 경우보다 제2인자 또는 후계자의 도움이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김정일에게 부분적 장애가 남는 경우 향후 1~2년 내에 제2인자 또는 후계자를 지명하여 공동통치하는 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의 건강이 완전 회복된 경우에는 후계자와 공동으로 통치를 하더라도 김정일이 통치의 전면에 나설 수 있겠지만,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제2인자 또는 후계자를 통치의 전면에 내세우고

김정일은 배후에서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김정일의 영향력은 빠른 속도로 쇠퇴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의 통치체제 변화 전망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더라도 후계자를 지명하고 사망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따라 통치체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첫째, 김정일이 유언으로 후계자를 지명하고 사망하거나 후계자가 이미 지명된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 김정일을 중심으로 뭉쳤던 권력 기관들의 관성과 대안 부재로 인해 북한 지도부가 적어도 잠정적으로는 지명된 후계자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그 후계자가 확고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과도체제는 지속적인 체제로 전환되겠지만, 후계자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권력 투쟁에 의해 다른 지도자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김정일이 앞으로도 수년간 생존 후 후계자를 지명한다면 김정철이나 김정운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의 매제인 장성택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성택이 권력을 승계한다면 적어도 흐루시초프가 집권 후 스탈린에 대해 했던 것처럼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격하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김정철과 김정운에 대해 후견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김정일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도부 내 권력투쟁에 의해 차기 지도자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조선로동당 내에서 군대의 지지를 확보하는 인물이 지도자로 선출될 것이다. 현재 리제강과 리용철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들은 각기 당 조직과 군대 조직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지하는 인물이 차기 지도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장성택이 현재 부장직을 맡고 있는 당중앙위원회 행정부는 군대를 지도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력투쟁이 발생한다면 장성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공산이 크다.

2004년에 장성택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직을 직무정지 당하는 과정

에서 리제강과 리용철 제1부부장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장성택이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리제강과 리용철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중 한 명 또는 김정철이나 김정운을 차기 지도자로 내세우면서 뒤에서 실권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김정일의 생존 시 또는 사망 후 발생하게 될 북한 통치체제의 변화에 한국정부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현실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까운 미래에 북한에서 발생하게 될 정치적 변동을 가지고 남한 군대가 북한으로 진격하거나 통일을 실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비현실적인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는 금물이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정책과 정권, 사회주의체제, 국가의 내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1990년대 중반을 풍미했던 북한 조기붕괴론은 북한의 경제정책 실패를 정권의 실패로 간주하고, 정권의 실패가 곧 정권의 붕괴, 체제의 붕괴,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에 크게 의존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다수 전문가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정책의 실패가 정권의 붕괴로, 정권의 붕괴가 체제의 붕괴로, 체제의 붕괴가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엄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북한이라는 국가의 붕괴 및 흡수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서독 통일 전인 1989년 동독 인구(1,640만 명)는 서독 인구(6,230만 명)의 약 1/4(26.3%)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서독은 495,000명의 병력을, 동독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220,1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서독은 동독에 비해 인구뿐만 아니라 병력 수에 있어서도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통합을 자연스럽게 주도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북한군의 감축을 유도해 그 영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지 않는 한 북한이 민주화되더라도 정치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동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한국정부가 남북한 통일의 실현을 원한다면 현재의 정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북한군의 감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북·미 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비핵화(북한의 핵포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가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남북한 관계도 연합 단계로까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향후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며 남북경협의 확대를 통해 북한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북한도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많은 청년들을 군대에 묶어둘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여타의 관련국들과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진전시키고, 개성공단의 확대 및 해주공단의 창설 등을 통해 북한 체제의 탈군사화를 촉진함으로써 '김정일 이후' 한국 주도의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정치체제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중국처럼 먼저 경제체제의 전환이라도 진전시켜, 언젠가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 경제적 이질성과 격차가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